

안팎 악재 겹친 여수박람회



2012 여수세계박람회가 대형 민자사업자 선정 무산과 박람회와 같은 시기에 네덜란드에서 열리는 대형 화훼엑스포 등으로 성공개최에 빨간불이 켜졌다. 지난해 서울 현대 계동빌딩에서 열린 '2012 여수엑스포 마스터플랜 시안에 대한 공청회'에서 참석자들이 엑스포 단지 조감도를 살펴보고 있다. <광주일보 자료 사진>

재정 투자 확대 없인 '성공 개최' 없다

3년 앞으로 다가온 2012 여수세계박람회가 대내외 악재가 겹치면서 성공 개최에 먹구름이 드리워지고 있다.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인해 여수박람회 중요 시설에 대한 각종 민자유치 사업이 줄줄이 무산되는가 하면, 여수박람회 개최 시기와 맞물려 네덜란드에서 또 다른 국제박람회 행사가 열릴 예정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여수박람회 규모는 대폭 축소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애당초 민간투자에 지나친 의존
경제난 닥치자 너도나도 발 빼
이대론 규모 축소·줄속 못 면해

◇대부분 민간자본으로 추진=이따라 무산되는 민자 유치는 경기 불황 탓도 있지만, 정부가 애초 박람회 기본 계획을 수립하면서 대부분의 사업을 민간으로 떠넘긴 데 따른 부작용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2012 여수 세계박람회 종합기본계획에 따르면 박람회장 건설 등 행사준비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는 2008년~2012년 기간 동안 시설비와 운영비 등 2조389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사업비 조달은 입장료와 휘장 및 광고, 시설임대 등의 부대사업비 수입을 통한 조직위원회의 자체 수입과 민간투자, 공공자원을 통해 충당된다. 그러나 정부는 총 사업비 중 34.9%인 7천107억원을 민간투자자, 이외 부족한 재원 5천902억원(28.9%)은 공공자원을 통해 조달한다는 계획을 세

웠다. 도로·항만·철도 등 사회간접자본시설(SOC)을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의 사업을 사실상 민간으로 떠넘긴 셈이다. 민자유치 대상 사업은 ▲아쿠아리움(586억원) ▲콘도(265억원) ▲엑스포타운(5천193억원) ▲독립기업관(173억원) ▲U-EXPO구축(300억원) ▲다목적 공연장(350억원) 등이 있다. 박람회 중요 시설 대부분이 민자유치 대상인 것이다. ◇경제난에 민자유치 '빨간불'=민자유치 대상 사업 중 박람회장 내에 건설 예정인 200실 규모의 고급 콘도(호텔)와 박람회 기반시설 가운데 핵심 전시시설인 아쿠아리움의 민자 유치는 연거푸 불발됐다. 이날 아쿠아리움 민자유치 사업이 무산된 것은 아쿠아리움 우선 사업자였던 두산과 한화 컨

소사업의 직접 투자 규모가 애초 계획보다 훨씬 못 미쳤기 때문이다. 정부 계획은 아쿠아리움 사업비 829억원 중 586억원을 민자로 유치하고, 243억원을 재정 지원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두산과 한화 컨소시엄은 200억원을 직접 투자하고, 나머지 500억원 가량에 대해서는 재정지원을 요구해 사업자 기준에 미달했다. 앞서 박람회 기간 동안 대회 참가국 대표와 BIE 임원 등의 숙소로 사용될 예정이었던 200실 규모의 콘도(호텔) 사업자 공모에도 단 한 업체도 응모를 하지 않아 숙박시설 확보에도 비상이 걸렸다. 이처럼 민자유치가 어려운 것은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 탓으로 분석되고 있다. 전남도와 조직위 등은 지난해 서울에서 2차례 투자설명회를 여는 등 민자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성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 이는 은행 자금 보증 또는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등이 어려워지면서 민간 기업들이 선뜻 사업에 나서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 지원 없으면 축소 불가피=정부는 수익성이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민간이 사후 운영 등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민간투자자를 유치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이처럼 민자유치가 이따라 무산될 경우 여수박람회 규모의 축소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민자유치 없이 재정이 투입될 경우

아쿠아리움의 규모나 콘도 등 숙박시설 등이 애초보다 축소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가 지금이라도 각 사업별로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민간자본 유치를 줄이는 방안을 강구해 적극적인 민자유치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같은 시기 또 다른 박람회 '악재'=국제박람회기구(BIE)는 지난해 12월 144차 BIE 총회에서 2012년 4월~9월까지 180일간 네덜란드 벨로시의 화훼박람회 개최를 승인했다. 이 기간은 2012 여수박람회가 열리는 5월부터 8월까지 겹치는 기간이다. 네덜란드 벨로에서 열리는 화훼박람회는 국제원예생산자협회(AIPH)가 BIE에 세계박람회 개최를 추천해 공인한 특수박람회다. 주제는 화훼 분야로서 여수박람회와 큰 차이가 있지만, 국제적인 관심도와 집중도가 떨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전남도 관계자는 "네덜란드 벨로 박람회와 여수박람회의 주제와 성격이 크게 다르기 때문에 참가 국가와 관람객이 겹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등록박람회는 5년마다 개최되며 인정박람회는 등록박람회 사이에 한번 씩 열리는 것으로 1993년 대전엑스포와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가 인정박람회로 분류되며, 네덜란드 벨로에서 열리는 화훼박람회처럼 BIE가 승인하는 특수박람회도 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5+2 균특법 통과 막아라

'호남 소외' 정부 개정안 4월 국회 처리 예상

지역 정치권 수정안 제시 등 특단 대책 요구

5+2 광역경제권 계획을 근간으로 하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이하 균발법 개정안)이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예정이어서 광주·전남지역 정치권의 특단의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균발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영남 2개, 호남 1개 등으로 광역경제권이 설정되면서 경제는 물론 각 분야에서 불균형 구도가 고착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16일 국회 의안과에 따르면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는 5+2 광역경제권을 근간으로 하는 정부의 균발법 개정안과 전북을 호남권에서 분리, 5+3으로 광역경제권을 설정하는 균발법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이하 균발법 수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4월 임시국회에서 2개의 법안은 분회의에 상정돼, 찬반 투표를 거쳐 처리될 예정이다. 문제는 본회의 표결 처리시 정부의 균발법 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우선 정부 주도 법안이라는 점에서 여당 의원들의 지지를 받을 개연성이 크다. 여기에 한나라당이 영남을 기반으로 하는 정당이라는 점에서 영남에 2개의 광역경제권이 설정되는 정부의 균발법 개정안을 택할 개연성이 높다. 4월 임시국회에서 정부의 균발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영남 2개, 호남 1개로 나누는 5+2 광역경제권이 설정될 가능성이 높다. 그동안 정부가 호남 지역 광역단체장과 호남지역 정치권의 지속적인 광역경제권 수정 요구를 외면해왔기 때문이다. 또, 정부가 대통령령으로 광역경제권 설정할 때 국회와 협의하기로 했지만 강제 규정이 아니라는 점에서 정부가 5+2 광역경제권 설정을 밀어붙인다면 이를 저지할 방법이 없다.

이에 반해, 전북을 호남권에서 분리, 영남과 호남을 각기 2개의 경제권으로 나누는 균발법 수정안은 영남지역 의원들의 비토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영남과 호남 2개의 광역경제권으로 나뉜다는 점에서 충청권과 강원권 의원들의 지지를 얻을지도 미지수다. 이에 따라 4월 임시국회 이전에 지역 정치권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당 지도부와 협의 등을 통해 4월 임시국회에서 균발법 처리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호남을 핵심 기반으로 하는 민주당 지도부가 한나라당과 물밑 협상 등을 통해 5+3 광역경제권 설정을 근간으로 하는 균발법 수정안이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다. 또, 이 방안이 어렵다면 5+3 광역경제권 계획을 근간으로 하는 균발법 수정안을 철회하고 '광역경제권 설정시 국회의 사전 동의'를 구한다'는 조항을 포함시킨 새로운 수정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수정안은 광역경제권 설정에 나름대로 불만을 가지고 있는 충청권과 강원권 의원들도 동조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적극 검토돼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광주시당 위원장인 김동철 의원은 "조만간 호남지역 의원들의 전체 회동을 열어 균발법 처리 방안에 대한 논의할 계획"이라며 "한나라당을 설득해서라도 호남이 소외받는 균발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한-EU, 공산품 관세 5년내 완전 철폐

FTA 8차 협상 앞두고 의견 접근

유럽연합(EU)이 우리나라 공산품에 대해 3년 내 99%(품목수 기준), 5년 내 100%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다. 우리나라도 EU 공산품에 대해 3년 내 96%의 관세를 철폐하고 5년 내 모든 품목으로 확대한다. 자동차의 경우 1천500cc 이상 중대형은 3년 이내, 1천500cc 미만 소형은 5년 내 관세 면제된다.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 문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마찬가지로 협정 발효 후 별도 위원회를 구성해 논의한다. 16일 정부 부처에 따르면 오는 23~24일 서울에서 개최되는 한-EU FTA 8차 협상을 앞두고 양측은 이 정도 수준까지 의견 접근을 이뤘다. 이해민 외교통상부 FTA 교섭대표와 베르세로 EU 수석대표는 지난 3~5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수석대표

회담을 갖고 잔여 쟁점을 정리했다. 우선 공산품 관세 철폐 시기와 관련해 EU는 3년 내 99%, 우리는 96%의 품목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고 5년 내 완전 철폐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핵심쟁점 중 하나인 자동차와 관련해 양측은 1천500cc 이상 중대형은 3년 내, 1천500cc 미만 소형은 5년 내 관세를 완전 철폐하기로 했다. 개성공단 문제는 한미 FTA 방식을 차용해 협정 발효 1년 뒤에 별도 위원회에서 역외가공지역(OPZ) 지정 여부를 논의할 수 있도록 하는데 양측이 의견 접근을 이뤘다. EU 측에서 계속 요구해 온 원산지 표기방식인 'made in EU'는 허용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양측은 8차 협상에서 잠정타결을 선언한 뒤 다음달 2일 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런던에서 통상장관회담을 개최해 한-EU FTA의 최종타결을 선언하고 상세 내용을 공개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Advertisement for 'World Peace' (평화를 사랑하는 세계인으로) featuring a quote: "나에게 삶은 어느 누구와도 의논할 수 없는 고독한 노정이었습니다. 이제 그동안 밝혀지 못했던 내 마음속 폭풍같은 이야기를 꺼내봅니다." and a portrait of a man. The ad promotes a book or program about world peace and personal growth.